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논란 '정부 추천용역' 으로 돌파

순천대·순천시 공모 불참 통보 불구 용역 착수 발표
6월까지 용역기관 선정...10월 대학 선정 정부에 추천
정부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하면 추진"

전남도가 순천시·순천대의 공모 불참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립 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도민들의 바람인 '국립 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순천시·순천대의 참여를 끝까지 기다리면서도 재공모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23일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에 해당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전남도는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월 말까지 대학을 선정,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용역기관이 선정된 이후에는 용역기관이 주도해 설립방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을 선정한다. 이어 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면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까지 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립방안심사위원회는 도민 건강권과 도내 지역 의료로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대 설립 방식을 선정하는데, 미션정 지역에 대한 보완 의료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애초 제시된 바 있는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지역 상생발전 ▲공정·객관·전문성 확보 등 원칙을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평가심사위원회는 대학에서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지역·대학 여

건, 도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대학을 선정한다.

전남도는 용역비로 예산 1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도는 특히 공모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순천대와 순천시를 대상으로 "무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면서도 공모 거부 의사를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에도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해 특정 대학이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하고 (그때도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순천대·목포대) 중 한 대학만을 (목포대)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라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명 부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대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은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받았"이라고 했다. 노 시장의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남도에 공모를 추진하라는 법적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모양새다.

대통령 발언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순천대·순천시의 반발은 대통령 발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도 공모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기본법을 들어 "정부의 요청에 의하면 (전남도가) 의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든 과정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고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花려한 장성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개막을 앞두고 23일 오후 황룡강 일원 축제장에 붉은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등의 갖가지 꽃들이 만개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축제는 24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된다.▶관련기사1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

尹대통령·中 리창·中 기시다 총리
경제통상 등 6개 협력 분야 논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린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 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북극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북스·'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든 사람들' ▶14·15면

광주FC, 인천 원정 6위 탈환 나선다 ▶18면

바다·숲으로 출퇴근...일상을 여행처럼 ▶22면

지난해 **국내·외 뉴스** 가 한 권에

'연합연감 2024년 판' 출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 정보 자료집 '연합연감' 2024년 판이 5월 2일 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보유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160여 명의 필진이 제작한 올해 연합연감은 2023년 한 해의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지방, 세계 등 각 분야 주요 뉴스와 각종 통계, 지표 등을 정리해 수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뜨거운 뉴스를 다룬 '초점'에서는 극단으로 흐르는 진영정치 등 정치권 움직임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에 절망한 피해자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강제징용 해법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의 이슈도 소개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는 사진과 그래픽, 표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편집하고 중요 사건·사고를 일지로 정리했습니다. 각종 현황은 국가별 지도,

면적연구언어 등 개요와 함께 최신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자료를 수록했고, 지면과 영상 매체, 포털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인사와 유명인들의 발언을 모은 2023년 '말·말·말'과 '주요 사건사고 일지', '분야별 10대 뉴스' 등도 수록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北의 잇단 도발로 인한 9·19합의 폐기 등 악화된 남북관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정권 실세로 급부상한 인사들과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동향을 보인 당·장군 주요 인사 200여 명을 선정해 프로필을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981년부터 연감 제작을 시작해 올해로 통권 44권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부처, 국회, 법원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 무료로 기증합니다.



규격 4×6배판 양장본
분량 1천200쪽 정가 18만원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종합 시사 정보 자료집

